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3. 7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【토지정보과】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토지정보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 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☐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○ 지명의 정의 신설 등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
법률」 일부개정(2022. 6. 10.) 및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 
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  
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☐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○ 법령에서 규정한 지명의 정의와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  
(도시철도역 명칭 비대상)을 반영하여 달서구 지명위원회의  
심의·의결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.(안 제2조제3호 삭제)

☐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○ 2023. 5. 11.~2023. 5. 31.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  
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,

○ 2023. 6. 29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☐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○ 비용이 별도 소요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☐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○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,

○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34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7. 7.  
제 출 자: 달서구청장  
(토지정보과장)

## 1. 개정이유

- 지명의 정의 신설 등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(2022. 6. 10.) 및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법령에서 규정한 지명의 정의와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(도시철도역 명칭 비대상)을 반영하여 달서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 조정(안 제2조)

## 3. 일부개정 조례안: 붙임 참조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2) 성별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4) 입법예고(2023. 5. 11. ~ 5. 31.) 결과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 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명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·의결한다.	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도로, 교량, 터널, 고가도로, 지 하차도, 교차로, 공원, 광장 등 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역 명칭 의 제정, 변경, 폐지 또는 조정</u>	<u>&lt;삭 제&gt;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□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간정보”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.

1의2. ∼ 9. (생략)

9의2. “지명(地名)”이란 산, 하천,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(地形)이나 교량, 터널, 교차로 등 지물(地物)·지역(地域)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.

10. ∼ 34. (생략)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1조의2(지명의 결정) ①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둘 이상

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지명을 결정(제91조의3에 따라 재심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·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·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자연·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제5조(지명 분류 체계)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.

① 자연지명은 산, 산맥, 골짜기, 고개, 평야, 꽃, 하천, 호수, 섬으로 구분한다 다만, 해양지명은 제외한다.

② 인공지명은 도로(지하차도, 고가도로, 육교, 교차로, 나들목(IC), 교량, 터널), 수부(인공호수, 저수지, 나루터, 보), 주거(마을, 신도) 공원으로 구분한다.